

투데이 칼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의 능력·비전으로 진행돼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종의 좋은 기회이자 꿈의 자리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검증 받는 공직 후보자들에게 아주 작은 흠이라도 없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그 '흠결'은 모이고 모여 일부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좋은 먹이가 된다. 이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공직 후보자들에게는 온갖 의혹과 루머가 난무하곤 했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큰 후보들은 더한 경우도 많았다.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에서도 그러한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면에 숨은 약간의 더욱 강하게 엮여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후보자 본인도 아닌 가족을 겨냥한 각종 의혹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에 어떻게든 후보자 본인을 얽어 넣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의 하이어나 식 노력에 언론이 이 때다 싶어 장단을 맞추는 풍에, 애꿎은 사람의 이혼 과정까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

나는 이해심이 넓은 것이 아니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의 관련성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이나 그 행위의 비도덕성 또는 위법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야당과 언론의 비윤리적 신상탈이로 인해 후보자 형제의 배우자는 본인이 왜 이혼을 했고, 그 이후 왜 같이 거주했는지를 방을 써서 보여야 했다. 이 점도 이해하기 힘들고, 자기 사재를 털어 장학재단을 만든 사람이 해당 재단의 정관에 위배되거나 특수 관계인과의 대가성이 없게끔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싶다.

전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씨 자녀의 군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 털렸을 때와 비교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병우씨의 아들은 본인의 복무 문제와 관련된 청탁 의혹이 이전부터 있어서, 특별 감찰관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이미 감찰을 진행하던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해 검찰로 사건이

이관됐던 바 있다. 이 시점부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씨는 이미 자유롭지 않다. 공직과는 거리가 멀던 시절의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있었던 일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일 아닌가.

사실 이해는 한다.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의 적격 여부는 그 사람이 해당 자리에 능력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 개개인의 수천만 개의 개별적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일을 그가 하나라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공직 후보자가 일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본인도 아닌 가족, 그것도 형제의 배우자의 이혼 사실까지 파헤쳐 가면서 여러 사람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일이 과연 그 후보자가 겪어야 하는 온당한 일이 될 수 있

는가?

그저 아니면 말고 식 폭로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한 의원의 주장을 조리돌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달게 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단독] 타이틀만이 눈앞에 어른거릴 뿐이다.

예전부터 그래 왔지만 새삼 환멸스럽다. 그런 정치인들은 그런 언론이 키워 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증명도 쉽지 않은, 국민정서에 의해서만 다뤄지기 쉬운 그런 흠결을 언론이 불러 줌으로써 오늘도 '청문회 스타' '사이다 정치인'을 꿈꾸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덩치만을 키워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지 의심스럽다. 특정 정치인의 메시지만 좇으며 그들의 사익에 봉사하는 언론, 과연 어떠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 자부터가 우선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바라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에서 그의 능력과 비전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과연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 그간 알려진 게 부풀려진 것은 없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 법무행정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가 과연 그 개혁의 책임자 등이다. 국민 대다수의 바람이기도 하다.

기고문

지난 8월 5일, 한남대교 전동킴보드 1대가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 1차선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 후, 아무 조치없이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킵라니' 사고영상을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킵라니란? 전동킴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킴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전동킴보드는 면허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단거리를 운행할 때의 편리함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 전동킴보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킵라니' 형인 이용자의 부주의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킴보드 운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전동킴보드는 '일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로 취급된다.

따라서 전동킴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한 물론, 인도·자전거 도로를 주행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킴보드를 타

'킵라니' 를 조심하세요



이 지 언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을 받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심지어 이번 한남대교 사고와 비슷하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일반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소리로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전동킴보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각자의 안전의식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탄소산업 투자 규모 보도 확실히 해야

전북도는 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 보도를 확실히 해야겠다. 2028년까지 1조4436억원을 투자하겠다는데 어떤 기분이 짙겠고도 섭섭하다. 예전같으면 반색하는 가운데 기대에 찬 말을 주었을 법한데 말이다. 그것은 엇그제만해도 앞으로 7년동안 7조원내지 8조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처럼 말한 까닭이다. 정부가 전북의 탄소 산업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던 게 머쓱하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예타 면제 선물을 준 그 이상이라고 기뻐하며 좋아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큰 거액을 투자할리가 없지 않는 생각이다.

어쨌든 전북도는 탄소산업에 줄기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전북에는 전주와 완주에 137개의 탄소기업들이 있다. 크게 좋아하다가 뒤로 넘어진 것처럼 기분이 씁쓸하지만 엇그제 당부했던 말은 유효하다. 이참에 전북의 탄소산업이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서야 한다. 대통령이 지원 약속한, 전북이 갖고 있는 탄소섬유 기술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지원에 부응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앞으로 탄소법 개정안의 조

속한 통과가 있어야 하고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 전략 마련이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탄소산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야심찬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다. 그 성공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다. 전북의 탄소산업과 관련해 미래 전망은 밝다. 최근에 효성이 전주 공장에 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도 그렇다. 일본의 무역 도발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타격을 받으리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역전의 계기가 되었다. 전북도와 관계자들은 이제 탄소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 탄소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 최고 막거리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분발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분명하다. 대통령의 약속 그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실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조4436억원도 적은 돈은 아니다. 그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또 무슨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2028년까지 투자될 1조4436억원으로 세계 탄소시장 10% 확보하며 일본 따라잡기가 제대로 성취될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작업 서둘러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급급하다. 지역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이니까 하는 말이다. 지난해 수도권이 노골적으로 탄압을 걸었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일 터이다. 정부가 전북을 제3금융도시로 지정하여 하자 부산상공회의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다시 틀어 생각해도 분노의 대상이다. 전북 금융은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중심이다. 부산 금융은 해양과 관련된 것이라 그 성격과 분야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서울은 종합 금융이니까 국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만 착실히 수행하면 된다.

서울과 부산의 방해 공작은 전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을 쟁취할 것처럼 하던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보다도 야속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반에 전북을 찾은 최중구 금융위원장에 송하진 도지사가 금융 발전을 부탁했지만 흔쾌한 답은 없었던 것이다. 그때 많은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걱정되는 게 있다고 했던 게 생각한다. 이렇다가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여간 큰 도전을 받는게 아니겠구나하는 열려가 그

것이다. 그러므로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지속적이어야겠다.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꼭 성취해내야 한다. 저번에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는 없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안된다는 우리 쪽의 책임도 아주 없지는 않다.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이제 서울과 부산만 탓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방해 공작이 패배하기는 해도 재반에 금융중심지 지정이 안된다는 이쪽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북도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전북도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저들이 제3금융도시 지정을 음해하고 방해하는 데는 꼬투리가 조금이라도 보여서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입을 막으려면 준비가 확실해야 한다. 기반 여건을 보강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북 혁신도시가 제3금융도시로 지정돼 지역 발전을 이끌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제3금융도시 지정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 아닐 수 없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